

사회

# 경찰청까지... 낮 뜨거운 흡피

## 성인·도박 유해광고 봇물... 대부분 외국 IP 속수무책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유해광고가 넘쳐나 해당 기관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수사기관인 경찰청 홈페이지까지 성인사이트 및 온라인 도박 광고로 도배되면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일 광주지역 네티즌 등에 따르면 A회사의 자유계시판에는 전날부터 이틀간 '신규포커사이트', '성인정보', '성인 맞고' 등의 유해 게시물을 50건이 3페이지에 걸쳐 빠르게 게시되고 있다.

A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김모(40)씨는 "매일 봇물처럼 쏟아지는 유해 광고를 막기 위해 아이피(IP) 주소 추적과 방화벽 설정 등 다양한 방법

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해물 게시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회사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유해물 게시에 속수무책으로 뒤흔리고 있는 것은 해당 광고 게시자 대안이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현지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해광고물이 수사기관인 경찰청 홈페이지까지 침투해 사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일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의 '자유계시판'에는 6개의 '실시간 화상 채팅' 사이트 광고가 하루종일 올라와 있었다.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날까지 게시된 글에는 '실시간 화상채팅', '무로로 랜들들을 감상 가능', '무로 성인화상'

등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유해광고는 최근에만 3~4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홈페이지 관리자 실시간으로 삭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지난 1일은 공휴일이라서 하루종일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자유계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사용자에 한정된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공공아이핀을 반드시 입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홈페이지 안전망이 뚫려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해광고가 게시됐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현재 경찰청은 최근 올라온 불법 계

시물의 IP 주소를 토대로 사이버 수사대에 추적을 의뢰했지만, 주소지가 필리핀과 중국으로 설정돼 게시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게시판 실명확인 인증 쪽에서 문제가 생겨 최근 홈페이지 방화벽이 뚫렸다"며 "세 번이나 점검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다 보니 조속한 조치를 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최모(여·27·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범죄금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 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음란물 광고를 보곤 깜짝 놀랐다"며 "적어도 수사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유해광고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정당방위 폭력은 처벌 않는다

### 경찰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경찰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폭행 연루자 모두를 무조건 입건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이는 입건하지 않는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다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입건했다.

지침에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요건을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 일 것 ▲침해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폭력 정도가 침해보다 중

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가 종료된 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지침이 정착되면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함이 해소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 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사회에 '맞는 게 상책'이라든지 '싸움을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폭력 사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될 정당방위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목포수협장 선거 비리 검찰 4명 보강수사 지휘

'목포수협장 선거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현 조합장 등 '돈 선거' 연루자 4명에 대한 혐의 사실 입증에 총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보강되면 앞서 고발된 조합원 4명과 함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4일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수선협동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는 목포수협장 최모(59)씨 등 4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검찰은 최씨 등에 대한 범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찰의 보강 수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들에 대한 송치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선거의 공소시효 만료(15일)를 감안해 조속히 보강 수사를 매듭짓고 이르면 8일경 최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목포시내 한 수산회사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김모(52)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최씨에 대한 선거 지원을 대가로 자신이 최씨에게 진 빚 2000만원을 탕감해주고, 당선되면 1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의 아들(33)은 선거 당일 자신의 아버지에게 투표를 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원에게 4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김모(54)씨는 이를 알선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앞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수협법 위반)로 고발한 P(60)씨 등 4명을 불러 조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자전거 고쳐 드립니다. 광주시 서구의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직원들이 4일 오전 양동 금호2차아파트를 방문, 고장난 어린이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다. 이동수리센터는 오는 6월까지 17개 동을 돌며 주민들의 자전거를 수리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과학관 공사 인부 추락사

4일 오전 11시5분경 광주시 북구 오룡동 국립광주과학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부 황모(50)씨가 15m 아래로 추락한 것을 동료가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황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단숨에 숨졌다.

황씨는 이날 5층 건물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유리창을 부착하기 위해 실리론을 바르는 작업을 하던 중 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8분 해질 18시 37분 달돋이 06시 44분 달짐 19시 00분

**6일 경칩** 대체로 맑고,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맑음	-2/10°C
목포	구름조금	-1/9°C
여수	맑음	1/9°C
나주	맑음	-5/11°C
완도	맑음	-1/9°C
구례	맑음	-5/11°C
해남	맑음	-5/10°C
장흥	맑음	-5/10°C
순천	맑음	-1/11°C
영광	구름조금	-3/9°C
진도	맑음	-3/10°C
전주	구름조금	-3/10°C
군산	구름조금	-2/8°C
남원	구름조금	-6/10°C
옥산도	구름조금	1/7°C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관심	낮음
목포	02:25	07:44
	14:49	20:04
여수	09:35	03:12
	21:40	15:33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9	0/8	-1/7	-3/8	-2/9	0/11

## 모텔서 판돈 4300만원 남녀 혼성도박 11명 검거

고흥경찰 5명 구속영장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 도박 판을 벌인 남녀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흥경찰은 4일 모텔 객실에서 주부들과 함께 화투 도박을 한 한모(39)씨 등 30~50대 남녀 5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조모(여·51)씨 등 40~50대 주부 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7시부터 같은 날 밤 12시까지 약 4시간 동안 고흥군 도암읍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판돈 4300만원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속칭 '도리치고뎌' 도

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씨 등 5명은 이날 모텔 객실을 빌린 뒤 고흥 선후배 관계이거나 평소 친분이 있던 조씨 등 6명에게 연락해 함께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1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남녀 7명은 도박 전과가 있으며, 도박에 참여한 한 주부는 1억원이 넘는 도박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전과의 유무와 상습성, 도박판을 벌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 광주MBC 신임 사장 서경주 前라디오본부장

광주MBC가 4일 주주총회를 열고 제13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서경주(53)전 MBC 라디오본부장을 선임했다.

서 신임 대표는 1957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카디프 웨일즈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MBC 라디오제작국 PD로 입사해 라디오편성기획부장

(2001), 라디오본부 CP(2002), 세계여성포럼 사무국장(2006), 라디오본부장(2009)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광주MBC 노조는 7일부터 서 신임 대표의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4일 "정대성 전 MBC 사장 임기 3년을 채우기도 전에 새로 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지역 MBC의 자율경영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양성철 前 광주경찰청장 기소

### '함바 비리' 사건 수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일 브로커 유상봉(65·기소)씨로부터 식당 운영 민원 등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로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청장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씨에게서 함바를 수수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서 생기는 각종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전 청장과 김병철(불구속 기소) 전 울산청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날 14일 이들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발령했다.

검찰은 유씨에게서 함바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수만 전 법무사업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내주 초까지 결정하고 '함바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지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강평길 前 여수해경서장 파면

### 해경, 간부 4명 징계

불법조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평길(58) 전 여수해경경찰서장이 파면 결정됐다.

해양경찰청은 4일 "최근 자체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강 전 서장과 각종 비위에 연루된 간부 4명을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전 서장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경남 통영지역 벌치잡이업자 20여명으로부터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것을 봐주는 대가로 20여차례에 걸쳐 총 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해경은 또 내부 감찰 결과 부하 직

원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떡값'을 받거나 경비합정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해경 간부 3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서해해경청 소속 A총경은 지난해 부하 직원 1명으로부터 명절이나 휴가를 전후해 3~4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징으로 강등이 결정됐다.

또 남해해경청 모 경찰서 소속 B경정은 지난해 경비합정 합장으로 근무하며 6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 결정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은 77명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 순창군수 향소심서 당선무효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4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한 향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무죄를 주장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강 군수는 각각 항소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 보안요원 가장 백화점 침입 신용카드 훔쳐 귀금속 구매

광주서부경찰은 4일 보안요원을 가장해 백화점 탈의실에 침입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매한 한 모(21)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2시30분경 광주의 한 백화점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백화점 직원 이모(여·24)씨의 신용카드 2장을 훔친 뒤 인근 금은방에서 금반지 등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보안요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양복차림을 하고, 무전기와 수갑까지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 '환불 해줘' 기계안 치랑통행 막아

○컴퓨터 수리업자에게 구매한 중고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환불을 요구하며 수리업자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50대가 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윤모(52)씨는 지난 3월 오전 11시50분께부터 같은 날 낮 12시40분까지 50분 동안 컴퓨터 수리점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박씨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약 1주일 전 박씨에게 22만원 가량을 주고 구매한 컴퓨터가 고장나 환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고물 컴퓨터를 판매해 놓고 환불해주지 않아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